

지역간 연계 ·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

(한국지방)

I. 지역간 연계 · 협력의 확대 필요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이며 “광역화전략”의 선진화를 통해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광역자치단체의 운영 매커니즘으로 전격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협력이란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의 개별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된

연계·협력도 포함하는 실용적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가까운 고령화·저성장 시대에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고, 재정과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중앙-지방간 협력사업,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민간기업과의 융복합화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협력방식을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 한정된 지역발전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연계협력사업을 통하여 중복투자자와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추가이익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을 공동 생산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추진역량을 증대시키고 임계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해야 한다.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지적으로 매년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다. 한편 조광역개발권의 연계협력사업은 농지임해안 인접 시군,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 1〉 연계협력사업의 지원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광특계정
기초생활권 (시·군)	—	83억원 (10개)	123억원 (12개, 신규 2개)	지역계정
광역경제권 (시·도)	540억원 (30개)	1,000억원 (46개, 신규 16개)	1,150억원 (46개, 신규 150억)	광역계정
초광역개발권 (광역권간)	67억원 (5개)	148억원 (6개, 신규 1개)	215억원 (9개, 신규 3개)	광역계정
계	607억원 (35개)	1,231억원 (62개)	1,488억원 (67+ α)	

2. 연계협력사업의 추진과정의 평가

정부에서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의 투자가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첫째, 계획수립 마감, 연계협력 사업의 평가, 예산 반영 등을 염두에 두고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다보니 즉흥적으로 급조된(ad hoc basis) 계획이 많아 발굴건수에 비해 사업계획의 충실도와 실현가능성 등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은 시간을 정해두고 마감하는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계획수립 단계에 임박해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

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 지